

2021년 도 제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21년 3월 25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고 승 범 위 원
임 지 원 위 원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주 상 영 위 원
이 승 헌 위 원(부총재)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사	유 상 대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박 종 석	부총재보
	이 환 석	부총재보	배 준 석	부총재보
	양 석 준	외자운용원장	김 영 태	커뮤니케이션국장
	김 웅	조사국장	민 좌 홍	금융안정국장
	이 상 형	통화정책국장	김 인 구	금융시장국장
	김 현 기	국제국장	신 운	경제연구원장
	박 영 출	공보관	채 병 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광 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2호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1) 관련부서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설정하며,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9월 24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여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35조원에서 8조원 증액한 43조원으로, 프로그램별 한도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2.5조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3조

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5.5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5.9조원으로 정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한도 유보분은 2022년 5월 31일까지 10.1조원에서 6조원 증액한 16.1조원으로 하되, 2022년 6월 1일부터는 0.1조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이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피해업체를 계속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의 운용 기한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3월 15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우선 위원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코로나19 전개 및 백신보급 상황,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여타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운용 기한 등을 감안하여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을 종전 2021년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의 운용 기한을 6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일부 위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상시적인 조치로 해석되지 않도록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향후 운용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당행의 금융지원이 코로나19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임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당분간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 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되, 향후 경기 및 신용공급 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중장기 운용 방향을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 종류 및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고 첨언하였음.

(3)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현재의 43조원을 유지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한도유보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현재의 16.1조원을 유지하되, 2022년 12월 1일부터는 0.1조원으로 한다.

<의안 제13호 - 2020년도 연차보고서(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102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정부에 제출 및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2020년도 연차보고서(안)을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보고서의 주요 특징으로 코로나19 상황 및 당행의 대응조치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점, 전달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각자료의 활용을 확대한 점, 그리고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조치 및 당행 주요 정책의 수행성과를 충실히 수록한 점을 들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이어서 3월 19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충실하고 시각효과 제고 등을 통해 가독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연차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당행 연차보고서의 수록 내용 및 체계 등에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계속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당행 유동성 조절 규모의 변동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부 그래픽을 보강하는 한편, 재무현황에서 주요 항목별 증감원인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한편 일부 위원들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인포그래픽(infographic)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20년도 연차보고서(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2020년도 연차보고서(안)(생략)

<보고 제17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17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보고내용 :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3월 18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인 금융안정상황을 충실히 점검하였으며 이슈 선정 및 분석 내용도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다만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종합평가 부분에서 금융불균형 심화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우려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하여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융지원 정상화 속도 조절이라는 제안이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여러 위원들은 민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먼저 고신용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득뿐 아니라 대출만기 구조 및 금리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은행 및 비은행 가계대출을 하나의 틀 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중금리대출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른 일부 위원은 가계의 투자자금이 간접투자에서 직접투자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국제비교 등을 통해 보다 심도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가계의 금융자산 리밸런싱(rebalancing)으로 인해 은행의 수신 구조가 단기화되면서 자산·부채 만기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러 위원들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기업간 격차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잠재부실규모를 추정하고 불균등 회복이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다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잠재부실이나 신용손실이 얼마나 우려할만한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아울러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등 원리금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취약기업들의 경영상황 및 장기존속 배경 등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일부 위원은 중앙은행이 기후변화 대응 및 고탄소산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배경에 대해 국제적 논의 상황 등을 포함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 심의결과

설명후 접수

(별첨)

「금융안정 상황점검」 관련 보고내용

실물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도 강건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

다만 가계 및 기업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한편 늘어난 민간부문의 부채가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택 등 자산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

실물경제 여건에 비해 과도한 신용축적 및 자산가격상승이 지속되면서 대내외 충격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증대

아울러 부문간, 업종간 경기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되면서 정부지원조치 등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금융시스템은 현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채 급증과 이에 따른 금융불균형 확대 등 중장기적 금융안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한 민간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현재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실질적인 신용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